

아시아브리프

Current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그림 1> 글로벌팩트 10 로고

출처: <https://globalfact10.com/>

Summary Of Article

정은령 서울대학교

팩트체크는 허위정보가 정보생태계를 교란하는 상시적인 위험 요인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 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허위정보에 맞설 수 있는 대안으로 지난 10여 년간 급성장해왔다. 6월 28~30일 전 세계 팩트체커들의 연례 컨퍼런스인 ‘글로벌팩트’가 대회 시작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인 한국 서울에서 SNU팩트체크센터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팩트체크의 세계화 흐름을 아시아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팩트체크, 받아쓰기를 넘어 사실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와 판정

2023년 6월 28~30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전 세계 팩트체크 기관들의 연례 컨퍼런스인 ‘글로벌팩트(Global Fact) 10’이 열렸다. 대회 시작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인 서울에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가 공동주최기관이 되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글로벌팩트 10에는 전 세계 80개국에서 대면으로 506명, 온라인으로 1,032명이 참여했다. 2014년 런던 정경대(LSE)에서 50여

명의 저널리스트와 팩트체커, 학자들이 모여 ‘글로벌팩트체킹서밋(Global Fact Checking Summit)’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 대회를 시작했을 때, 이것이 10년 후 거대한 세계적 흐름이 되리라고는 참석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탈진실(post truth), 가짜뉴스(fake news)가 민주주의 사회의 정보생태계를 교란하는 위험 요소로 대두되면서 이에 맞대응하는 팩트체크도 성장해왔다. 듀크대 리포트스 랩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 151개였던 팩트체

크 기관은 2023년 6월 현재 417개로 늘어났으며, 100개국에서 69개 언어로 팩트체크가 수행되고 있다.

팩트체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것이 언론인들이 기존에 해오던 사실 검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언론인들은 물론 언론학자나 시민들도 혼란스러워한다. 팩트체크가 독자적인 직종으로 미국 언론계에 등장한 것은 100여 년 전이다. 그러나 이른바 현대적 팩트체크(modern day fact-checking)는 1980년대 말 이후 미국 언론계에서 저널리즘 혁신운동의 성격으로 싹텄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팩트체크의 수행 주체도 언론인들만이 아니라 팩트체크만을 전문으로 하는 팩트체커, 사회운동가, 학자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현대적 팩트체크는 20세기 초 미국 언론계를 중심으로 확립된 객관주의 보도(objective reporting)의 전통적인 규범들과 차이가 있다. 객관주의 보도는 사실을 가치와 분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객관주의 보도 규범에 따르면 기자들은 정치적인 논쟁이 있을 경우, 논쟁의 주체들을 공정하게 재현해야 하며, 보도하는 사실에 대해 논평을 더하거나 편향을 보이지 않고 ‘뉴스’만을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팩트체크를 하는 언론인들은 정치인 등이 제기한 주장의 정확성을 직접 평가(evaluation)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객관주의 규범과 대조를 이룬다. 현대적 팩트체크의 초점은 “발언을 정확하게 인용했는가에 있기보다는 보도하고자 하는 발언이 정확인가(focus on the accuracy of reported speech rather than on whether a reporter got a quote right)”에 있다. 즉 현대적 의미의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화자가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쓰기’하는 것을 넘어, 그 발언이 사실인가를 기자들의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규명한 뒤 판정 결과를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검증과 해석, 판정이라는 평가적 과정(evaluative process)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미국 언론에서 하나의 장르로 시작된 팩트체크는 다른 나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5년 영국의 채널4는 미국의 팩트체크닷오르 그를 본떠 자체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프랑스에서는 2008년 일간지 리베라시옹이 팩트체크를 수행하는 데장톡스(Desintox)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흐름은 유럽 대륙을 넘어 남미, 아프리카, 호주로 번져나갔다. 팩트체크의 ‘글로벌 붐(global boom)’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붐에 힘입어 2015년에는 미국 포인터 재단에 근거를 둔 국제팩트체크연맹(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 IFCN)이 창설됐다. 각국 팩트체커들의 자발적 결사체 성격인 IFCN은 연례 서밋인 글로벌 팩트(Global Fact)를 열고, 온라인과 대면으로 팩트체크 교육을 진행하고, 팩트체크 기관들에 필요한 지원금과 펠로우십을 제공한다.

IFCN의 역할 중 핵심적인 것은 전 세계 팩트체커들이 지켜야 할 규범인 준칙(Code of Principles)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준칙의 5개 항목은 △비정파성과 공정성 △취재원 투명성 △재정과 조직의 투명성 △검증방법의 투명성 △공개적이고 정직한 수정이며, 이 준칙의 세부사항을 준수하는 팩트체크 기관은 인증기관(signatory)으로 인정된다.

IFCN이 인증기관들을 설문조사해 발표한 “2022 팩트체커들의 현황 보고(2022 State of the Fact-Checkers Report)”에 따르면 설문 응답 기관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건강 관련 허위정보 폭로(96.8%)였다. 정치인 혹은 고위 정부 인사들의 발언 검증 등 전통적인 정치 팩트체크(94.6%)와 경제문제에 대한 팩트체크(88.2%)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에서 저널리즘 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출발했을 때의 팩트체크의 주된 관심사는 권력자 발언의 사실성 검증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사실검증을 해야 할 이슈가 변화된 것이다. 전 세계 모든 팩트체크 기관들은 편집권 독립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거대 테크기업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은 팩트체크 기관들의 생존에 중요한 자원이다. 허위정보가 유통되는 거대 테크 기업의 플랫폼을 감시하면서 동시에 이들 테크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긴장 관계의 공존모델인 것이다. 일례로 구글과 유튜브는 세계 각국의 팩트체크 기관을 돕기 위해 2025년까지 1,320만 달러(한화 약 174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고, IFCN이 Global Fact Check Fund라는 이름으로 이를 재분배하고 있다.

점증하는 중국발 허위정보에 대한 우려, 국가 주도 팩트체크의 등장

6월에 열린 ‘글로벌 팩트 10’의 주제들은 현재 팩트체커들의 고민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드러냈다. 1일 차에는 ‘팩트체크의 현황’ 2일 차에는 ‘선거와 민주주의’ 3일 차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가 주제로 다뤄졌다. 컨퍼런스 첫날 서울대 이은주 교수는 팩트체크 메시지를 접한 이용자의 강한 확증편향이 사실 인식이나 정보 공유의도, 해당 이슈의 중요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즉 ‘사실을 보도한다’는 것만으로는 확증편향을 가진 정보소비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것이 팩트체커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러시아가 생산하는 허위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핀란드의 탐사 기자 제시카 아로는 러시아의 허위정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 브렉시트,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아시아의 국내 정치에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정보가 보이지 않는 정보전쟁의 주요한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허위정보 확산을 억지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체

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다. ‘글로벌팩트 10’에서도 틱톡, 메타, 유튜브 등의 관계자들이 세션을 진행했다. 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 이후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 영구 정지 결정을 주도했던 요엘 로스 전 트위터 신뢰 안전 책임자는 사이버 폭력이 “소셜미디어의 원죄”이자 “플랫폼의 콘텐츠 모더레이션에서 가장 큰 실패”였으며 플랫폼 기업들이 안전한 정보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팩트 10’에서는 아시아 팩트체크의 특수한 정황도 논의됐다. 4월 인도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팩트체크 부서가 등장했다. 정부 운영 팩트체크 부서에서는 언론에서 여전히 논쟁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팩트체크가 끝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낸다. 팩트체크와 정부 홍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것이다. 인도의 민간 팩트체커들은 정부가 팩트체크에 직접 나서서 것은 검열이나 언론의 고유한 비판 기능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아시아 역내에서 점증되는 중국의 선전과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우려가 표명되었다. 2022년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은 조작된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세계적인 뉴스통신사 AP를 통해 여러 나라 매체에 소개되었고, 조작이 밝혀진 후에도 여전히 사진이 삭제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 이른바 중국 요인(China factor)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홍콩, 대만의 참가자들은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허위정보 캠페인의 목표는 시진핑 정권의 지속성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발 허위정보 못지않게 반중·혐중 허위적 보도 아시아 지역의 정보생태계를 교란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인도네시아의 팩트체크기관인 템포(TEMPO)는 1년 동안 69건 이상의 러시아발 허위정보를 폭로하였다. 허위정보의 내용은 인구 대다수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인들의 종교적 지향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허위정보는 언론매체에 의해 증폭되어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옹호를 이끌어내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인도와 스리랑카에서는 기후위기를 둘러싼 허위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정보격차로 인해 기후위기의 직접적 피해자들이 사태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글로벌팩트 10’에서는 AI에 의해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허위정보 생산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어떻게 챗GPT 등 생성형 AI의 허위정보를 감별해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할 것인가 등이 논의됐다. 플랫폼을 통해 대량 유통되는 허위정보에 맞서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팩트체크와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는 세계 각국의 팩

트체크 기관들이 주력하고 있는 주제다. 자동화된 팩트체킹의 핵심적인 요소는 지금 무엇을 검증해야 하는지를 식별(identification)하는 것과, 이렇게 식별된 것을 이미 존재하는 팩트체크나 믿음만한 정보원과 대조하여 검증(verification)하고 이를 허위정보나 오정보에 노출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팩트체크를 발간해 교정(correction)하는 단계로 이뤄진다. 그러나 맥락에 대한 판단이나 민감성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동화된 팩트체킹에 의존하기는 어렵다. 단순한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는 한정된 영역에서 자동화된 팩트체킹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인간 팩트체커의 감독이 아직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구심점, SNU팩트체크

한국 언론계에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본격화한 것은 2017년으로 평가된다. SNU팩트체크는 2017년 3월 29일 임박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출범했다. 한국에서 팩트체크가 진행되어온 역사와 SNU팩트체크의 연혁이 일치하는 것이다.

SNU팩트체크의 특징은 협업형 모델이라는 것이다. 일차적인 협업은 대학과 언론사 간에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SNU팩트체크 플랫폼을 기획, 개발한 뒤 SNU팩트체크센터를 통해 플랫폼을 운영한다. 언론기관이 아닌 학계가 팩트체크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게 된 이유는 한국 언론의 정파적 지형 때문이었다.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교집합으로 공유하는 취재 보도의 영역은 좁아졌고, 서로 간의 소통도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영역인 대학이, 정파적 성격을 막론하고 오직 사실검증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목적을 충족하는 결과물을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SNU팩트체크의 단위 게시물은 ‘배지(badge)’로 불린다. 각 배지의 생산은 언론사들의 검증대상 입력으로 시작한다. 각 언론사들은 검증대상을 선정한 후 해당 대상을 검증하게 된 이유를 보충설명으로 밝히고,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검증한 내용과 근거자료, 전문가 인터뷰 등 검증방법을 서술한다. 근거자료는 웹 주소나 링크 제시 등 최대한 이용자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한다. 최종적으로는 SNU팩트체크의 여섯 가지 판정 기준 즉 ‘사실’부터 ‘사실 아님’까지의 5단계와 ‘판단유보’ 중 선택하여 평가결과를 입력한다. 평가결과까지 입력하고 나면 검증을 진행한 언론사는 배지를 노출한다. SNU팩트체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네이버 뉴스 홈에 연동되어 노출됨으로써 대중적으로 확산된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기타



코로나19 검사용 면봉에 발암 물질이 들어 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코로나바이러스



KBS 연합뉴스 중앙일보

〈그림 2〉 3개 언론사가 교차검증한 SNU팩트체크 결과물

SNU팩트체크 플랫폼에서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언론사들이 상시 교차검증(cross checking)을 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팩트체크 모델이다. 제휴 언론사들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교차검증을 하되 언론사 간의 협의 없이 각자 독립적인 팩트체크를 한다. 교차검증의 결과는 일치하거나 한 단계 정도의 미세한 차이를 보일 때도 있지만, 3단계 이상의 상반된 결과가 나와 ‘논쟁 중’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교차검증을 시행하는 이유는 각각의 언론사가 사실성의 판정에 이르기까지 동원한 증거의 차이, 해석의 차이를 이용자들이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나와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관용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2023년 8월 26일 현재 교차검증은 전체 4,868개 중 639개(290건)로 12.6%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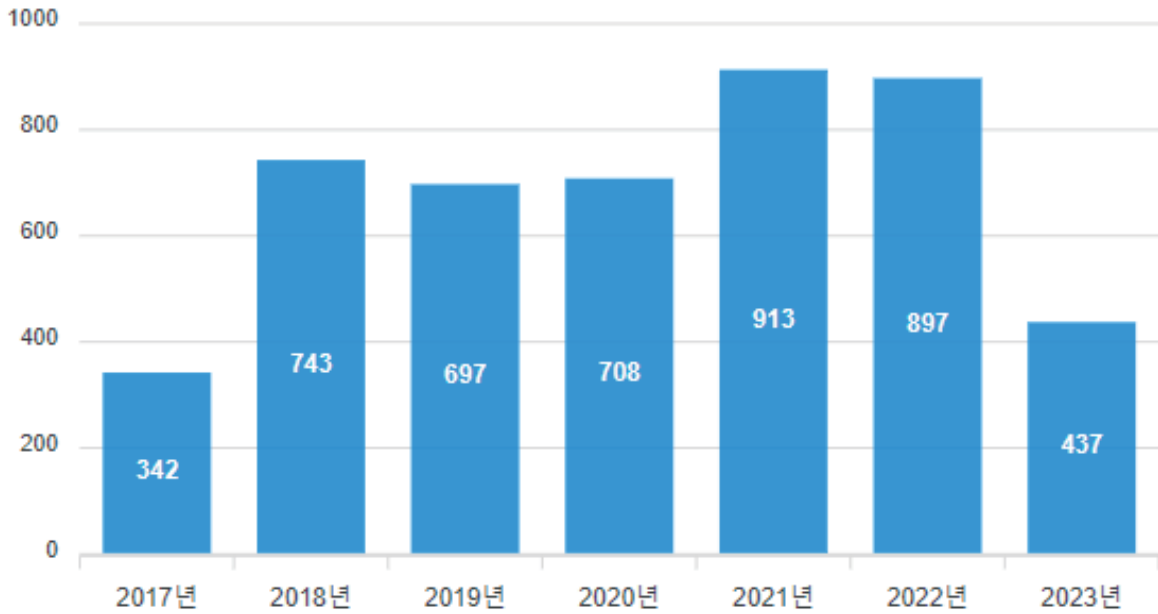
국내 유일의 팩트체크 플랫폼인 SNU팩트체크에는 32개 제휴 언론사들이 검증한 4,737건(2023년 8월 26일 기준)의 팩트체크 결과물이 게시됐다. 2021년 913건, 2022년 897건 등 해를 거듭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SNU팩트체크 제휴 언론사들이 가장 많이 팩트체크한 기사 분야는 사회분야(34.6%, 2,558건)였다. 근소한 차이로 정치분야(32.7%, 2,418건)가 2위였으며, 경제분야 팩트체크가 3위(12.2% 903건)였다. SNU팩트체크가 시작된 이래 19대와 20대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팩트체크도 활발했다. 팩트체크 주제는 정치에서 사회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부정하는 정치적 양극화

SNU팩트체크 6년간 활동의 성과는 먼저, 기자들의 인식변화에 있다. 팩트체크에 참여하는 언론인들은 한국 언론이 “벌어진 사실들을 그냥 ‘사실’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받아쓰기 저널리즘을 수행함으로써 언론수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받아쓰기 저널리즘과 달리 팩트체크에는 정밀한 조사과정이 필요하다.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투입되므로, 노동생산성이 낮다. 사회적으로는 의미 있는 콘텐츠이지만 언론사 경영상으로는 수익성이 높은 콘텐츠가 아닌 것이다. 팩트체크가 고비용 콘텐츠인데 비해 팩트체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팩트체크를 하는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언론사들이 팩트체크를 해야 할 경제적 유인이 없는 가운데, 사실 확인이 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본원적 역할이라는 사명만을 강조하여 동참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년간 SNU팩트체크 제휴 언론사들의 검증수준은 점진적으로 높아졌다. 팩트체크는 의견을 검증하지 않는다. 측정 가능한 실체적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검증한다. 취재원 몇 사람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은 충분한 증거로 간주되지 않는다. 논문, 보고서, 법원 판례, 통계 등 신뢰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증거들은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 등을 통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SNU팩트체크가 시작된 첫 해인 2017년 단위 팩트체크 기사의 평균 근거 수는 0.45개였다. 그러나 2023년의 평균 근거 수는 8개로 늘어났다. 기사 평균 길이는 2017년 1,183자였으나 2023년 현재 3,414자로 늘어났다. 증거를 공개하는 팩트체크 기사의 투명성, 다양한 증거로 설명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맥락성이 강화돼 온 것이다.



〈그림 3〉 SNU팩트체크 홈페이지 팩트체크 게시 건수(2023. 8. 26. 기준)

팩트체크와 관련해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불편부당성이다. SNU팩트체크 제휴 언론사들은 2019년 10월 만장일치로 SNU팩트체크원칙에 합의했다. 그 첫 번째 조항이 “팩트체크는 불편부당성과 비당파성을 견지해야 한다”이다. 그러나 SNU팩트체크 원칙이 어떠한 강제성도 가지지 않는 합의이기 때문에 각 제휴 언론사가 검증대상 선정과 검증 과정에서 편향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이와 관련하여 SNU팩트체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팩트체크 위원회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권고문을 채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후보들의 주장을 검증할 것”을 제휴 언론사들에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SNU팩트체크 혹은 SNU팩트체크 제휴 언론사 중 특정 언론사들이 한쪽 진영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선택적인 팩트체크를 한다는 정파적인 비난은 끊이지 않는다.

한국의 팩트체크 저널리스트들은 자신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압력이 정치적 양극화라고 토로한다. 하나의 팩트체크 결과가 “팩트체크를 한 기자가 극렬 좌파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기자가 극우적폐 세력이다”라는 양극단의 비난을 동시에 받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진영에 불리한 팩트체크 결과에 대해

서는 가짜뉴스라고 비난하거나, 팩트체크한 기사를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팩트체크 저널리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도, 시민도, 민주주의를 흔드는 위험요소라고 우려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이유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자칫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 손쉬워 보이는 법적 규제 대신 팩트체크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 등의 대책을 내놓는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콘텐츠를 만들기도, 광고수익을 얻기도 쉬워진 미디어 환경에서 허위정보는 양극화된 정치지형과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대한 불신, 확증편향과 같은 정보이용자들의 인지적 편향을 자양분으로 삼아 확산된다. 그러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허위정보 문제를 법으로만 규제하려고 할 경우 언론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고, 복잡다기하게 펼쳐지는 허위정보의 진화 양상을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허위정보를 억지할 대책은 SNU팩트체크의 사례처럼 민간에서, 언론과 플랫폼기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하여 상호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 이 글의 내용은 아시아연구소나 서울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관련 자료

- Amazeen, M. A. (2020). "Journalistic interventions: The structural factors affecting the global emergence of fact-checking." *Journalism* 21:111-195. <https://journals.sagepub.com/>
 - Graves, L. (2019). "Understanding the promise and limits of automated fact-checking. In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Factsheets*. <https://ora.ox.ac.uk/>
-

Tag: 허위정보,팩트체크,저널리즘,글로벌팩트,SNU팩트체크

정은령(ryung0305@snu.ac.kr)

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장, 국제팩트체킹연맹(IFCN) 이사
전) 동아일보 사회부 차장, 언론중재위원

주요 논문: “코로나 19 팩트체크 기사와 해설 기사의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맥락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7(3), 2020.

“팩트체크 뉴스와 한국 방송 저널리즘의 신뢰 회복: 방송 기자들의 팩트체크 뉴스 양식과 뉴스가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31(1), 2019.

“한국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특징: 팩트체크 언론인들의 사실 인식과 사실 검증과정 탐색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5(4), 2018.

발행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발행인: 채수홍 **편집위원장:** 채수홍 **편집위원:** 이명무, 김윤호
편집간사: 박효진 **편집조교:** 강정은, 민보미, 김용재 **디자인:** 박종홍

연락처: 02-880-2087, snuac.issuebrief@gmail.com

아시아브리프의 목표

- 아시아의 현안 분석과 정책적 함의 제시
- 한국의 아시아 진출 전략 개발
- 메가아시아 건설을 위한 공론장